

KBA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WEEKLY BRIEFING

2022.3.21 – 3.25

VOL.305

CONTENTS

I EU TRADE POLICY

- ▶3.21 프랑스, 전쟁 악영향 우려에 수입 농식품 상호주의 요구 잠정 중단
- ▶3.21 EU,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 등 배제 권고
- ▶3.21 민간 연구소 ERCST, CBAM 도입시 수출환급 등 검토 필요
- ▶3.22 EU, 對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...EU 회원국 결속력 주목
- ▶3.22 독일, 블루수소 수입 등 UAE와 수소 분야 협력 확대
- ▶3.23 EU,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로 미국 양자간 협력 확대...TTIP 재협상은 부정적
- ▶3.23 EU, 식량 안보 우려에 농약 사용 감축 등 법안 제안 연기
- ▶3.23 미국-영국, 섹션 232 철강 관세 철회에 합의
- ▶3.24 EU 및 각 회원국,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조치 추진
- ▶3.25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, 디지털시장법(DMA) 최종 합의...2023년 발효
- ▶3.25 EU-미국,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근거 'Privacy Shields' 재협상 타결
- ▶[공지] 마그레브 경제사절단 모집 안내(파견기간 2022.5.24.-27)

II EU 환경규제 뉴스 -KIST EUROPE 제공

- ▶3.25 NGO 단체, 혼합물 평가계수(MAF)의 REACH도입 촉구

① 프랑스, 전쟁 악영향 우려에 수입 농식품 상호주의 요구 잠정 중단

●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불안 우려 속에 이른바 '거울조항(mirror clause)' 추진을 잠정 중단

- 거울조항은 수입 농식품에 대해 EU의 생산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, 이른바 농업 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항
- 거울조항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는 당초 21일(월)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EU 집행위가 거울조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, 6월 경 회원국간 합의 달성을 목표
- 전쟁 발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 농업장관이사회는 전쟁에 따른 식량, 농업 및 농산물 수출입관련 사항을 주요 의제로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, 거울조항 관련 안건은 이번 이사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
- 다만, 프랑스는 거울조항 도입을 장기적인 작업으로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결정적 모멘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차 확인

●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EU 농업 정책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, EU 농식품 전략 'Farm-to-Fork' 및 EU 공동농업정책(CAP) 수정, 식량안보 강화 주장이 확산 중

② EU,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 등 배제 권고

● EU 집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조달사업 계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을 배제토록 권고

- 유럽의회 국민당그룹(EPP)은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EU의 모든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을 배제할 것을 촉구, 집행위가 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
- 이와 관련, 집행위는 EU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사이에 공공조달 분야의 상호주의 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이 부재한 점에서,
- EU가 관련 조치 확정시까지 각 회원국이 독자적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제한이 가능하다고 언급
- 이에 집행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이 회원국이 시행하는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국내적 조치로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

- 집행위에 따르면,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가 EU와 회원국의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의 입찰에 이미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● 한편, 폴란드는 **러시아 제재조치 일환으로 러시아와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**

- EU는 지난 주 러시아 사치품 수출 및 철강 수입 금지, 최혜국 대우 박탈,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금지 등 4차 제재안을 확정, 금주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예정
-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19일(토) 4차 제재 패키지와 같은 품목별 제한적 통상금지를 더욱 확대, EU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와 전면적 통상제한을 촉구

③ 민간 연구소 ERCST, CBAM 도입시 수출환급 등 검토 필요

● 민간 연구소 '유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라운드테이블(ERCST)'은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(CBAM)에 수출측면의 고려를 촉구

- ERCST는 집행위 CBAM 법안이 철강 등 EU에 수입되는 탄소집중배출 상품에 초점을 두고, EU가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강조,
- 이는 CBAM이 수입 상품의 탄소유출 가능성 예방에 집중하고, 수출용 상품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출측면의 탄소유출 예방 조치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
- * CBAM은 환경규제가 낮은 제3국 수입품을 EU의 환경규제 준수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, 같은 논리로 EU 수출품과 제3국의 규제 준수 비용의 차이를 보전, EU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한다는 것
- ERCST는 수출측면의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CBAM 보완 조치로 △수출기업에 대한 CBAM 인증서 면제, △수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 면제, △수출기업에 대한 탄소무료배출권 유지, △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연기 등 방안을 제안
- 수출환급의 적법성과 관련, 적법 및 불법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,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EU의 전략적 결정 및 선택이며,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

④ EU, 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...EU 회원국 결속력 주목

● EU의 러시아 추가 제재의 대상 및 발동 계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원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됨

-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앞서 1~4차 제재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후 허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,

-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대한 EU의 소극적 태도가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, 일부 제재 피로감 주장에 대한 경계도 촉구
-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 전쟁 초기와 달리 향후 러시아의 동향에 상응한 추가 제재 옵션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

● [추가 제재 발동 계기]

- EU는 러시아의 화학무기(또는 그 이상의 대량 살상무기) 사용을 추가 제재 발동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,
- 비공개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, 민간인 대량학살, 인도적 통로에 대한 공격 등을 추가 제재의 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또한, 지난 4차 제재 합의가 EU 정상회의 성과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주 예정된 EU 정상회의의 추가 제재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,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새로운 제재조치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
- 이와 관련, EU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정시 단시간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, 다양한 5차 추가 제재 옵션을 검토 중

● [추가 제재 옵션]

-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스베르뱅크와 가스프롬뱅크 등 2개 은행의 SWIFT 접근 차단이 거론되고 있으며,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면 무역금지, 덴마크는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이용 요건 강화를 요구
- 체코 등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당수 회원국이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, 이에 소극적으로*, 최대 쟁점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와 관련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

* 헝가리는 이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관련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

⑤ 독일, 블루수소 수입 등 UAE와 수소 분야 협력 확대

- 독일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(UAE)과 수소 분야 연구 개발, 효과적 운송 등의 협력을 위한 일련의 계약을 체결
- 독일은 2030년까지 청정 수소 수입량을 연 약 3백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UAE와 잠재적 수입계약 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, 2017년 UAE와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

- 독일은 이번 UAE와의 수소 분야 협력 등 계약을 통해 양측 수소 관련 기업 협력 확대,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및 UAE 에너지부와 수소 분야 연구협력 등을 추진
- 또한, 양측이 체결한 계약은 연구개발 이외에 수소 운송, 합성 연료(그린 팔콘), 20메가와트 규모 소형 전기분해기 파일럿 프로젝트 출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 특히 UAE에서 생산한 블루수소*를 올 연내 독일로의 선적을 개시할 계획
- * 블루수소는 탄소포집저장(CCS) 기술을 적용,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수소로, 신재생에너지를 이용,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에 비해 덜 친환경적 방식의 수소
- 다만, 블루수소가 화석연료(천연가스)로 생산되는 점에서 친환경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, 수소라는 중간단계 없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독일의 블루수소 수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

⑥ EU,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로 미국 양자간 협력 확대...TTIP 재협상은 부정적
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EU와 미국간 에너지, 원자재 및 미래 전략 분야 협력 촉진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
- EU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EU와 미국간 협력 촉진의 계기가 되고 있으나,
- 아직 EU-미국간 무역기술위원회(TTC)를 통한 협력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, 향후 양자간 협력 범위를 LNG 수입, 원자재 공급 협력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
- 이에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, 금주 예정된 NATO, G7 및 EU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, 보조금을 통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에너지 위기 대응, 에너지 공동구매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
- 또한,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-영국간 포스트 브렉시트 양자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며, 이를 위해 영국에 브렉시트 관련 국제법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
- 한편,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2016년 협상이 중단된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(TTIP) 협상 재개 등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
-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독일 크리스티안 린트너(자유민주당, FDP) 경제부 장관이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한 것으로,
- TTIP를 '장기간 보관중인 냉동고 식품'에 비유, TTIP가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, 미국과 무역협정은 TTIP 재협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

- 이에 당분간 미국과 TTC를 통한 협력을 추진, 향후 무역협정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

⑦ EU, 식량 안보 우려에 농약 사용 감축 등 법안 제안 연기

-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분야 주요 전략인 'Farm to Fork' 및 생물다양성 전략과 관련한 중요 법안의 제안을 연기
 - EU는 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△2030년까지 농약(살충제) 사용 50% 감축을 위한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의무 부여, △생물다양성 강화 위해 EU 농지 10%를 고도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보호 약속' 등 법안을 23일(수) 발표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
 -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 분야 전략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, 집행위 내부에서도 두 법안 제안 시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가운데,
 - EU 이사회에서 루마니아, 폴란드, 슬로베니아 등이 가스 등 에너지 및 농업 원자재 가격 급등, 식량 공급망 강화 등 식량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법안의 연기를 촉구
 - 반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,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목표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
- 한편, 환경시민단체(Friends of the Earth Europe)는 법안 연기를 엄중한 실수라고 강조,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요구
 - 유럽 살충제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계단체 CropLife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 사유에 공감하나, CropLife가 법안 연기를 집행위에 요청한 바는 없으며, 조속한 법안 제안을 희망한다고 언급

⑧ 미국-영국, 섹션 232 철강 관세 철회에 합의

- 영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확장법 섹션 232(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)에 근거한 철강 관세 면제에 합의, 23일(수) 발표 예정
 - 올 초 개시된 양자간 철강 협상이 2개월 반 만에 합의에 이르렀으며, 이번 합의로 미국의 對영국 철강 관세 및 영국의 對미국 보복관세가 동시에 철회될 전망
 - 미국은 영국 철강 제품에 대해 연간 50만 톤, 알루미늄은 연간 2만 1,600 톤의 쿼터를 부여, 쿼터 초과 수입에 대해 각각 25%, 10%의 관세를 부과하며, 합의 사항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

- 영국 철강업계는 對美 수출 철강에 대해 2018년 이후 25%의 철강 관세를 부담, 브렉시트 이후 이를 승계했으며, 미국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며 영국과 관련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
 -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도 불구하고, 미국은 섹션 232 철강관세를 유지하며 영국과의 협상을 거부해왔으나, 최근 입장을 전환, 이번 철강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렀으며,
 - 영국은 철강 관세 합의가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상 재개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, 협상이 개시되면 18개월 이내 타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

⑨ EU 및 각 회원국,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조치 추진

- EU 및 각 회원국은 미국 액화천연가스(LNG) 수입, 발칸반도, 북해, 북아프리카 등지와 가스 및 전력망 확장을 통한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에 주력
 - EU는 대체 천연가스 수입원으로 카타르, 미국,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가스 공급을 협의하고, 금주 G7,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LNG 수입 관련 보장을 요청할 방침. 원유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(UAE)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
 - 또한, 24~25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, EU 27개 회원국은 천연가스, LNG 및 수소 공동구매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
- 이하는 주요 EU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조치 개요
 - [그리스] 이집트와 해저 전력망 연결 강화를 우선 추진. 발칸반도 국가와 에너지 협력 강화. 불가리아 원전과 장기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. 해저 가스 저장소 개선 및 알렉산드로폴리스에 두 번째 해상 LNG 터미널 건설 등
 - [불가리아] 국내 사용 가스의 70~90%, 원유의 60%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. 올 해 가스프롬과 신규 가스공급계약 체결 거부. 그리스를 통한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 및 이를 위한 연내 가스관 부설 개시. 불가리아가 지분을 보유한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리스 LNG 터미널을 통한 가스 수입
 - [루마니아] 동유럽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편. 연내 흑해 가스전 채굴 개시(연간 약 10억m³). 아제르바이잔, 불가리아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터키와 에너지 협력. 그리스-불가리아 가스관 경유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 추진
 - [슬로베니아] 이탈리아 가스관 경유 북아프리카(알제리) 가스 수입 확대. 크로아티아 LNG 터미널 → 이탈리아 가스관 경유 가스 수입. 카타르와 에너지 협력 추진

- [이탈리아] 알제리, 카타르, 콩고, 앙고라 및 모잠비크와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공급 협력 추진. 다만,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, 45%에 달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의존도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
- [스페인] 전체 가스 수요의 10%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, 러시아 에너지 수입중단의 영향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을 전망. 대부분의 가스는 알제리에서, 석탄은 콜롬비아 및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중. 스페인은 최근 그리스, 이탈리아, 포르투갈과 함께 유럽 전력시장 개혁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족
- [영국] 영국의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는 4%로 미미. 영국은 최근 파쇄 방식의 셰일 가스 채굴을 가스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서 배제하고, 대신 북해 유전의 원유 및 가스 탐사,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추진
- [프랑스] 가스 수요의 20~30% 및 원유의 10~20%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. 대체 공급원으로 LNG 수입 역량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
- [독일] 원유 대체 공급원 확보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,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가스 대체 공급원 확보를 추진. 석탄 발전을 비상시 공급원으로 사용. 미국, 노르웨이, 카타르 및 UAE와 LNG 수입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확보에 주력
- [네덜란드] 2021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 총 160억 유로를 지출.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장기적 전략을 추진. LNG 수입 역량 강화. 이미 고갈된 그로닝겐 가스전의 재가동은 현 단계에선 제외.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
- [폴란드]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시에도 그단스크 항구를 통한 대체 원유 수입으로 충분한 공급량 확보 가능하지만, 구체적인 원유 수입원은 다소 불분명. 가스의 경우 발틱 가스관 경유 스칸디나비아 가스 수입 확대
- [슬로바키아]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85%로 매우 높은 편. 크로아티아 LNG 터미널을 통한 미국산 LNG 수입 확대. 비교적 충분한 가스 비축시설을 활용하고, 내년 겨울 대비 충분한 가스 비축량 확보
- [체코] 노르웨이와 가스 수입 확대 협의. UAE와 에너지 협력 추진.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석탄의 퇴출 시기 연기. 2036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등

⑩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, 디지털시장법(DMA) 최종 합의...2023년 발효

-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4일(목)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'디지털시장법(DMA)' 법안에 최종 합의, 2023년 발효 예정
- DMA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,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

- 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 시장의 빠른 혁신에 적절히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, 플랫폼에 작위·부작위 의무(dos and don'ts)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법적 분쟁시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전환하는 등 혁신적 경쟁 관계 접근법으로 평가
- EU 집행위는 2023년 DMA 법안 발효를 위해 법적 흠결 제거 및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정의 및 이행 규정 등 세부사항을 준비 중

● [적용대상 플랫폼]

- DMA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(EEA) 역내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
- 이에 따라,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주로 포함되고 유럽의 Booking.com, 중국의 알리바바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*
 - * DMA 적용대상으로 주로 미국 기업이 포함되게 되는 점에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, 경쟁법 위반 우려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럽의회의 입장이 수용됨
- DMA 적용대상 서비스는 (전자상거래 등) 중계서비스, 온라인 광고, 검색엔진, 소셜미디어, 비디오 공유, 메시징, 운영체제(OS), 웹브라우저, 가상 지원 서비스 등

● [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의무]

-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지정되면, 디지털 시장 공정성 보장,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기업의 플랫폼 이외 수단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의무가 부과됨
-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△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(번들링) 금지 △복수 서비스(예,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)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금지 △메시징 서비스간 암호화 통신 상호 호환성 보장(일부 조건하에 그룹채팅도 포함), △디지털 장비의 초기값 설정 금지(가상지원 또는 웹브라우저 등 선택권 보장) 및 초기 프로그램 삭제 가능성 등을 보장해야 함
- 또한, △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, △자사 서비스 사용 강요 및 대체 서비스 사용 제한 금지, △정보생성에 기여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및 이전권을 보장해야 함
- 소셜미디어, 앱스토어 및 검색엔진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, 운영체제도 보안 등 일부 조건하에 대체 앱스토어 접근을 허용해야 함

- [과징금] DMA 법 규정 위반시 EU 집행위는 위반 기업의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10%, 반복적 위반시 최대 20%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

- 한편, 애플은 DMA 법안이 개인정보 및 보안에 불필요한 취약성을 초래하고, 애플이 투자한 여러 지적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비판

⑪ EU-미국,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근거 'Privacy Shields' 재협상 타결

- EU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발표
 -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2020년 무효화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'Privacy Shields' 협정의 재협상을 진행 중이나,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
 -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정보 공유 등 협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, 일부 EU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짐
 -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, 양측은 일부 기술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, 양자간 Privacy Shields 협정 재협상의 핵심 쟁점인 미국 정보기관의 EU 시민개인정보 불법수집 감시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곧 확정될 예정
 - 이와 관련, 최근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협상상의 개인정보 취급을 감독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,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유럽 시민에 개인정보 위반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한편, 유럽사법재판소가 두 차례 양자간 협정(Safe Harbour, Privacy Shields)을 무효화한 바 있어, 양측이 EU의 사법 테스트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 여부가 주목됨

⑫ 마그레브 경제사절단 모집 안내(파견기간 2022.5.24-27)

- 한국무역협회는 주튀니지대사관과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마그레브 시장 진출 지원 및 민간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'마그레브 경제사절단'을 파견할 예정입니다. 이번 사절단은 현지 및 아프리카 유력 경제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기업인 간 사업기회를 모색하고,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-튀니지-아프리카 라운드테이블과 부대행사 등에 참여할 계획이오니 동 사절단에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[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](#)

II

EU 환경규제 뉴스 - KIST EUROPE 제공

① NGO 단체, 혼합물 평가계수(MAF)의 REACH도입 촉구

- NGO 단체인 CHEM Trust는, '유럽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REACH 개정 사항에 혼합물 평가계수(Mixture Assessment Factor, 이하 MAF)*를 도입하고, 화학물질 혼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'을 촉구했다. CHEM Trust는 3월 10일 발표된 '화학물질 혼합물(Chemical Cocktail) - 무시된 독성 혼합물의 위험과 해결방안'이라는 보고서**를 통하여 MAF가 10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
[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](#)